

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888
- 발 의 자 : 오경환 의원 외 10명
- 발 의 일 : 2015년 11월 13일
- 회 부 일 : 2015년 11월 17일

2. 제안이유

-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정비하여,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구성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3조).
- 나. 협의회 회의 의결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8조제3항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)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(23명 이내 → 30명 이내)하고(안 제3조제1항), 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며(안 제3조제3항), 협의회 주요 의결사항을 보완(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:통합방위사태 ‘선포’ → ‘선포·해제’)하려는(안 제8조제3항) 것임.
-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,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, 통합방위 대비책,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,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,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안 제8조제3항은 현행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의 “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조례의 기준”을 반영하여 서울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통합방위협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〈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〉

※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9. 지방병무관서의 장
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1. 지방의회 의장
12. 지방소방관서의 장
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〈현행 및 개정안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비교〉

현 행	개 정 안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. 서울특별시 교육감 3. 수도방위사령관 4.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5. 서울지방 경찰청장 6. 국가정보원 제2국장 7. <u>서울지방 병무청장</u> 8. <u>서울지방 교정청장</u> 9. <u>서울지구 기무부대장</u> 10. <u>서울지방 국세청장</u> 11. <u>서울지방 보훈청장</u> 12. <u>서울 체신청장</u> 13. <u>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장</u> 14. <u>연합뉴스 사장</u> 15. <u>서울특별시 여성단체 연합회장</u> 16. <u>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</u> 17. <u>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장</u> 18. <u>KT서울북부법인사업단장</u> 19. <u>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</u> 20. <u>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</u> 21.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	1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. 서울특별시 교육감 3. 수도방위사령관 4.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5. 서울지방 경찰청장 6. 국가정보원 제2국장 7. <u>서울지방국세청장</u> 8. <u>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</u> 9. <u>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</u> 10. <u>서울시 비상기획관</u> 11. <u>서울지방병무청장</u> 12. <u>서울지방보훈청장</u> 13. <u>서울지방교정청장</u> 14. <u>서울지방우정청장</u> 15. <u>서울지구기무부대장</u> 16. <u>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</u> 17.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

- 협의회 구성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, 그동안 있었던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장, 연합뉴스 사장, 서울특별시 여성단체 연합회장,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장, KT서울북부법인사업단장,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,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제외하고,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및 소방재난본부장을 추가하고자 하고 있음.

※ 개정 : 서울 체신청장 → 서울지방우정청장

- 통합방위협의회에 서울시 안전 및 소방 관련 본부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, 서울시 행정의 유기적인 통합과 행정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 - 다만,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는 하나, 최근 협치가 강조되는 등 서울 시정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, 전시대비 등에 있어서도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, 민간 위원 축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※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 수를 확대(23명 이내→30명 이내)할 뿐만 아니라 안 제3조제3항제17호(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)에 따라 추가 위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, 향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등 민간의 자원봉사영역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의 추가 구성 방안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.
- 안 제8조제3항은 협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현행 통합방위사태 ‘선포’뿐만 아니라 ‘해제’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으로,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제3항제3호의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.

※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

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

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"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2. 통합방위 대비책
3.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
전 문 위 원	김 태 한
입법조사관	최 현 재